뿌리 내리는 귀농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연구

귀농운동론 2.0의 구체화를 위한 실행연구

유정길* /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소장
정기석 / 귀농정책연구소 정책분과장, 무주농민
전희식 / 귀농정책연구소 사상분과장, 장수농민
백승우 / 귀농정책연구소 운동분과장, 화천농민
고강현 / 귀농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화천농민
박기윤 / 화천현장귀농학교 교장, 화천농민
박종관 / 상주농민

연구 필요성

최근 전국 귀농·귀촌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29,368가구, 2016년 335,383가구, 2017년 346,759가구로 매년 순증가했다. 이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의 활로로 귀농이 장려되고, 1958~1961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귀농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귀농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996년 9월 19일 전국귀농운동본부 설립 당시 우리 사회는 GNP, GDP를 척도로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였고 이농 분위기도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이때 지속가능한 사회를 염

---

* **유정길**: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농촌에서 대안의 삶을 찾고, 실효성 있는 현실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려하는 사람들의 예언자적 소명으로 귀농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귀농운동은 디지털과 IT산업이 융성하던 사회 흐름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무모한 운동이라고 인식되었다.

사회 분위기 변화는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이루어졌다. 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업 사태가 국내에서 일어나고, 생태와 환경위기가 더는 유보할 수 없는 국제적 문제가 되자 물질과 풍요, 돈과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성숙, 삶의 질과 생태적 삶이 더욱 소중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귀농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높아졌고 귀농자가 점차 늘어났다. 또한 2000년 중반부터 활성화된 도시농부와 도시텃밭운동은 하나의 '현상'이라 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다. 서울을 비롯하여 인근에 사는 고양, 분당, 의정부, 과천, 용인 등 경기도 인근의 도시민 1/3이 주말농장과 도시텃밭을 일구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 확산속도는 매년 빨라졌다.

2014년에는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귀농인구가 많아졌고 최근에 정부도 귀농교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귀농자를 받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귀농, 귀촌은 하나의 트렌드이자 유행처럼 확산되었고, 더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지역공동체운동, 마을 만들기 운동, 로컬푸드운동 등은 귀농·귀촌운동을 더욱 활성화했다.

귀농운동은 단순히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흙과 농적 문화에 기반한 자연 친화적 생태적 삶을 근본으로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자본과 개인주의적 문화가 농촌을 급속히 오염시키지 않고, 공동체문화를 파괴하지 않도록 새로운 귀농운동과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운동이 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만들기 등 활동과 조응하여 새롭게 활동방향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곳곳에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각종 교육은 귀농을 새로운 돈벌이 영역으로 보거나 마을 주민들과 떨어져 별장 생활을 구가하는 개인적인 삶으로만 국한하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과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귀농자가 농촌에 잘 정착하고 지역 농민과 협력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귀농운동본부가 생태적 귀농과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만든 <2016 귀농운동론 2.0>의 각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운동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 내용

1. 귀농운동론 2.0

귀농운동본부는 그동안 귀농이라는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귀농자에게 올바른 철학과 자세로 귀농하도록 교육 중심 활동을 해왔다. 설립 초기보다 귀농 귀촌이 사회의 주류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야말로 귀농을 '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귀농운동론은 과거의 단순 귀농과는 달리, 옛날의 농촌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과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농촌과 농업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사회는 도시보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정책연구소에서 10가지 의제를 확정했다.

▶ 하나, 생태귀농에서 '생활귀농'으로 전환한다

귀농인은 흔히 유기농을 하는 농부로 생태적 생업과 최소한의 인간적 기초생활을 꿈꾼다. 그러나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1천만 원에 불과하다. 영세한 초기 귀농인은 이 수준도 안 될 것이며, 기초생활 보장은커녕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쌓인다. 생태적 귀농을 기초로 하면서도 생활이 가능한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생활귀농'이라야 지속가능하다.

그러자면 '지역사회 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 귀농인과 주민이 공유·협업하는 '지역공유유휴시설 사회적(경제)자산은행' 등을 통해 기초·기본생활 지원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 둘, 농업귀농에서 '농촌귀농'으로 발전한다

농촌에는 농부 외에 다양한 일터와 일자리에 종사하는 '마을시민(Commune Citizen)'이 필요하다. 농부만 모여 사는 곳은 자칫 공장식 농장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 다채로운 마을시민이 어울려 '삶과 일'도 어울려야 비로소 '농촌마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마을주민으로 정착하기 위해 공동경영 마을기업, 공동생산 시설, 구인·구직 지원센터, 창

업 지원센터 등이 지역 곳곳에 세워져야 한다.

▶ 셋, 생계귀농에서 '복지귀농'으로 심화한다

귀농인의 기초생활, 생계는 개인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저 1%를 위한 '돈 버는 농업'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99%를 위한 '사람 사는 농촌'으로 농정의 근본 기조부터 바꾸어야 한다.

농민 또는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유럽식 농가소득 보전 직불제, 마을공유 농지, 마을양로원, 마을공동식당, 마을공공 임대주택, 마을에너지발전소 등 마을 단위 사회안전망, 마을농지 공유화를 위한 농지신탁제, 마을공유지 등이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

▶ 넷, 마을귀농에서 '지역귀농'으로 확장한다

귀농인이 마을 안에만 갇혀서는 적정한 규모의 경제사업도, 유기적인 지역사회활동도 영위할 수 없다. 자칫 지역공동체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고 표류하며 낙오할 위험이 있다. 마을 안에서 마을 밖의 지역으로 경제사업 규모와 사회활동 범위를 확대, 확장해야 한다.

'지역단위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유기농 로컬푸드, 지역농민시장', '지역화폐 발행, 지역농민은행' 등을 조직하는데 도시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귀농인이 앞장서야 한다.

▶ 다섯, 경제귀농에서 '문화귀농'으로 승화한다

'억대농부'가 되려는 경제적, 세속적 욕심이 아니라 '사람 사는 삶'의 문화가 귀농의 핵심 동인이다. 농촌을 상업적 관광지나 놀이터처럼 훼손하는 농촌관광 사업부터 재고, 경계하고 휴양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농업으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독일은 상업적인 농촌관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농부는 국민의 별장지기, 국토의 정원사로 불린다. 농민은 지역 역사, 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전통 생활문화예술의 공동체 문화를 계승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 여섯, 단독귀농에서 '공동귀농'으로 협동한다

개별 귀농보다 뜻과 목적을 공감, 공유하는 공동, 집단귀농이 되길 권장하고 있으며 귀농이 추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다. 마을공동체사업, 지역공동체활동을 벌일 때 서로 협동해서 체계적인 사업조직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노동자 공동귀농 협동조합', '귀농인·소농 중심 6차농업 생산자협동조합', '에너지자립 생태 생활공동체마을', '귀농인, 소농 중심 6차 생산자협동조합(Gemeinschaft)' 등의 실천모델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 일곱, 독립귀농에서 '연대귀농'으로 진보한다

귀농인 혼자 좋은 농사를 짓기는 어렵다. 마을주민, 지역사회는 물론 도시민, 소비자와 지속적,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거래해야 한다. '농업회의소 중심 자생적 지역학습조직', '농민, 노동자, 도시민 상생기금', '도시민(도시농업인) 직거래 네트워크' 등, 이웃과 더불어 공조, 협업하는 연대활동을 통해 더욱 자립하고 안정적인 귀농이 될 수 있다.

▶ 여덟, 개인귀농에서 '사회귀농'으로 진화한다

농촌에서도 이기주의자는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으로 낙인찍힌다. 마을공동체의 이웃, 지역사회의 타인을 이타적으로 배려하는 공익적, 공공적 시민의식과 선도적 실천역량부터 갖추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운동, 로컬푸드 유통, 토종종자 보전 등 풀뿌리 순환자치 경제네트워크 구축, 평화통일농업, 생태농부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홉, 관치귀농에서 '자치귀농'으로 자립한다

오늘날 정부의 귀농지원정책은 진정성이나 실효성이 기대와 필요에 미치지 못한다. 농정철학의 부재, 농정정상화의 의지 결여가 고질적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귀농인끼리 자조와 자립을 통한 자치와 자생이 최선의 자구책일 수 있다, '귀농인 생활자치 생태공동체

마을' 모델, '귀농형 마을기업(사회적경제)' 모델, 그리고 '귀농농가 적정 가계경영' 모델을 스스로 함께 개발해 공유하고 전파해야 한다.

▶ 열, 운동귀농에서 '사업귀농'으로 전향한다

기존의 민간 귀농운동 지원조직은 농업,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귀농사업과 농가경영, 교육, 문화, 생활복지 등 귀농생활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수준의 위상과 기능으로 거듭나야 한다. 귀농운동본부의 자생·자립 사업구조 구축, 농업, 농촌형 사회적경제 등 '귀농사업지원센터' 운영, 가계경영, 자녀교육 등 '귀농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귀농운동'에서 '귀농생활'로 귀농의 가치관과 방법을 대전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2. 정책토론

본 연구는 귀농운동론 2.0에 제안된 7가지 쟁점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7차례에 걸친 정책토론의 사회는 본 연구자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포럼 주제와 내용을 기술한다.

가. 마을시민론, 마을공동체론(1차 정책포럼)

▶ 마을만들기에서 마을 살이, 마을 살리기로

귀농을 통해 이루려는 마을은 과거의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마을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중략) 이를 위해서 귀농자를 포함하여 마을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배움의 장을 조직하고, 생활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생활기술학교'도 필요합니다. 한편 마을 주민이 참여한 '생활문화예술축제' 등, 공동체 문화의 전통을 되살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귀농운동론 2.0).

농촌마을공동체를 되살리려면 마을에 사는 시민, '마을시민'이 많이 내려와 뿌리를 내려

야 한다. '마을시민'이란 말 그대로 마을에 사는 시민으로 "지역공동체적 사회자본, 혁신적 인적자본으로서, 마을 또는 지역사회공동체 사업에서 주체적 역할을 감당하는, 농촌 및 지역 주민"을 뜻한다. 마을 공동체사업의 책임 주체인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역량을 갖춘 책임 있는 사업 주체 역할과 책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시민은 치열한 도시에서 갈고 닦은 경험, 기술, 노하우, 지식정보 같은 빛나는 무형자산을 귀농생활의 도구이자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농촌에는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 농촌마을공동체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역량과 품성을 갖춘 다양한 '마을시민'들이 필요하다. 그런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사회적경제의 '사회(community)'와, 공동체의 '사회(commune)'를 두루 잘 학습하고 성찰한 선각자, 혁신가라야 한다. 마을과 지역사회 공동체 현장의 지역사회디자이너 또는 생활기술 전문가로서 '마을시민'이라야 한다.

우선 농촌에서 '먹고 살 일거리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경제적 마을시민'이 중요하다. '마을기업'과 '마을시장'의 영역을 개척하고, 친환경농부가 일하는 '마을농장', 농식품가공원으로 취직할 '마을공장', 직거래 유통상으로 근무하는 '마을가게', 그리고 도농교류 또는 농촌체험 지도사로 활동하는 '마을공원' 등의 사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6차 산업으로 농장, 공장, 가게, 공원이 융복합적으로 묶여 운영되는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을시장의 영역은 유럽의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은행 같은 농민의 은행과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대안은행을 아우르는 '마을은행'이 기반이다. 여기에 스위스 미그로(MIGROS) 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보따리 마을 상인'들이 모이는 '마을장터'가 결합한다. 이렇게 마을기업과 마을시장 관련 사업분야의 운영주체인 '경제적 마을시민'만으로도 얼마든지 '마을에서 먹고 살만한 일터와 일자리'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 사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마을시민에 교육적, 문화적, 생태적 마을시민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서로의 부족한 곳을 채워주며 협동하고 연대하면 생활마을공동체의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분야의 일자리는 '마을학교'와 '마을학원'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학교는 유소년부터 청소년까지 돌보는 어린이학교, 청년에서 노인까지 보살피는 어른학교가 모두 필요하다. 마을학원은 명상, 문학 등을 배우는 마음학원, 춤, 그림, 노래 등을 가르치는 몸학원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마을시민'들은 마을학교와 마을학원에서 전문교사로서 소중하고 유용한 인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 분야의 '마을생활원'에서는 마을펜션과 마을회관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마을카페, 마을공동식당 등을 마을공동편의시설로 하며 마을의 공동생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도록 한다. '마을문화관'은 마을도서관, 마을박물관, 마을극장, 마을출판사 등의 활동을 하며, 마음문화관과 몸문화관의 활동은 사회복지사, 마을관리사 등 각 시설의 운영 및 관리자, 사서, 큐레이터, 공연예술인, 기자, 편집자 등은 도시에서 하던 일을 마을에서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태건축 등의 엔지니어들이 적정기술 모델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마을발전소'가 마을의 활력과 동력을 책임진다. 마을을 인문과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마을연구소' 등 '마을연구개발(R&D)센터'도 필요하다. 또 '마을체험캠프'를 통해 마을캠프, 자연캠프 등의 체험지도교사, 청소년지도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의 일자리 수요와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 제1차 정책포럼(2017.4.14., 환경재단)

나. 농민의 지역통화와 귀농화폐(2차 정책포럼)

▶ 농민 지역화폐(또는 농민금융)운동

농민지역화폐(local currency, local money, LETS) 등을 발행 운영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귀농인들이 주도하는 자유시장(free market)이나 벼룩시장(flea market), 그리고 지역의 농민들이 만나고 어울리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을 활발하게 운영한다면 돈이 없이도

[그림 2] 제2차 정책포럼(2017.5.19., 환경재단)

서로의 능력과 기술을 교환하며 살 만한 농촌을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귀농운동론 2.0).

지역화폐(Local Currency) 또는 레츠(LETS: 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로 불리는 지역통화는 각자 가진 물품이나 재능을 일정한 교환원칙을 기반으로 공정성과 등가성을 갖고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돈에 의존하지 않고 살 방법은 결국 사람들의 관계와 협력, 나눔과 공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화폐라는 매개를 통해 실행하는 것인데 방식은 크게 실제 화폐 사용유무에 따라 지폐방식과 계좌방식이 있다. 지역통화는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한국도 첫 지역화폐인 한밭레츠를 비롯하여 지역별로 도입 및 사용하고 있다.

한편 귀농화폐는 지역화폐와 유사하나 차이가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거래방식이지만 귀농화폐는 귀농자의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자의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의 각종 재능과 중고 물건을 교환하는 매개로 사용할 수 있다. 귀농화폐는 쇼핑몰이나 전담기구를 통해 계좌를 만들고 운영하는 품앗이 형으로 운영하거나 전담기구가 은행역할을 하여 발행하고 통용하도록 할 수 있다.[1] 그리고 가입비와 정기적 회비를 받아 일정 비율을 귀농화폐로 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로 귀농자의 판로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구상되었지만, 보완이 필요하

1) 금창영 '귀농화폐의 운용원리와 가능성', 귀농정책연구소 제2차 정책포럼 자료집 『지역공동체와 귀농자를 살리는 귀농화폐』. p23

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견해였다. 궁극적으로 귀농자의 생산판로는 가능한 지역에 뿌리내리면서 대면적인 지역공동체에 공고한 결합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고, 최근 서울시 등에서 귀농자를 위한 상설 판매장터를 만들려는 조치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귀농 붐을 계기로 안정적이고 다양한 판로에 대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생태공동체와 전환마을운동(3차 정책포럼)

▶ 생태공동체마을 만들고 살아가기

우리가 일구어야 할 문명의 첫 번째 과제는 농촌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농민운동이 해체되어 가는 마을공동체를 지키고 복원하고자 주력했다면, 우리의 귀농운동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창조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문화 중에서 살려야 할 것은 살리되, 회복하기 어려운 것, 소멸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지혜를 찾는 일입니다. 과거와 '단절하면서 연속하는 운동'입니다(귀농운동론 2.0).

세계 경제는 환경위기와 자원한계 등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은 막을 내렸다. 이제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성숙의 시대'인 것이다. 돈과 재화에 의존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던 가치는 질타를 받는 시대이다. 이들의 호칭마저도 '소수국가'와 '다수국가'로 대치되고 있다. 소수 선진국의 물질생산과 자원소비가 인류를 오늘과 같은 절멸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뒤를 따라가는 발전은 더 권장할 모델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장의 시대는 돈이 중심이지만, 성숙의 시대에는 관계가 중심이다. 사람 간에 의존도를 높이고 결합력과 관계의 깊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사회이다. 수많은 사람이 공동체운동을 추구하며 생태공동체와 전환마을을 만들고, 나눔과 공유사회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최근 생태공동체운동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공동체운동은 계획공동체(Intentional Community), 공동주거운동(Co-housing), 생태마을운동(Ecovillage) 등 다양한 공동체운동과 일본의 마찌츠쿠리(まちづくり) 등의 마을만들기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유럽의 공동체운동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마을을 생태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더욱

확장성이 크다는데 주목하여 전환마을운동 전략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전환마을은 먹거리 자립, 지역순환의 가치, 지역에서 텃밭가꾸기. 태양광발전소, 지속가능한 의료협동조합, 전환마을 예술학교, 퍼머컬처학교, 토종씨앗지키기, 반GMO활동 등 지역에서 실현하는 일을 하는 것과, 마을 구성원이 사회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공부모임과 책읽기 등 자발적인 모임, 그리고 자기가 딛고 있는 땅에서 사회적 전환, 문명적 전환을 시도하는 개인적이며 마을 단위의 집단적 노력을 말한다.

기존의 마을운동이 정부의 하향식 사업으로 시작된 것과 달리 전환마을운동은 마을이 가진 자원을 스스로 찾아내고 마을 스스로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둔다. 마을은 삶터이지 투자중심의 마을개발사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이 끝나면 마을만들기 활동도 끝나는 경우가 많다.[2)]

따라서 마을만들기운동은 외부투자와 지원이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되 마을구성원의 자발성과 내발적인 동력이 기조가 되어 다양한 전환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농운동은 단순히 농촌공동체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현대의 문명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문제는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이기에 지속가능한 사회는 곧 지속가능한 인간관계에 기초한다. 서로 한계를 규정하지 않

[그림 3] 제3차 정책포럼(2017.6.17., 산림문학관)

2) 소란, '생태공동체와 전환마을운동, 영국 토트네스와 한국의 사례', 귀농정책연구소 제3차 정책포럼 자료집 『생태공동체와 전환마을운동』 13p

고, 국가라는 집단적 관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지구시민으로 모두가 연결된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기초해야 한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토대로 결국 사람과 사람이 친하게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3)]

라. 농지 신탁운동, 농지 공유운동(4차 정책포럼)

▶ 농지 신탁(트러스트)운동

농지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여의도 면적이 넘는 규모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을 육성하려는 목표 때문입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농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보전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줄어들고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한번 전용하면 사실상 복원이 어렵습니다. 적정한 규모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인구, 식생활 변화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농지보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귀농운동론 2.0)

최근 귀농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농사지을 땅의 마련이다. 그러나 갈수록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토지매입이 어렵다. 현재 노인들만 남아있는 농촌의 10년 뒤의 '농지'는 '부동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농사짓지 않는 자식들에게 승계되면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농업용 토지가 줄어든다.

공동체토지신탁(CLT: Community Land Trust)이나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공동체토지신탁(CLT)이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토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토지를 시장에서 분리해 개인이나 공동체의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구조물을 짓게 하되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1987년에서야 헌법 제9장 121조에 실리게 되었

---

3) 오노 마사시, "마을운동과 생태공동체운동-새로운 문명운동으로서의 애즈원네트워크 스즈카커뮤니티의 시도", 귀농정책연구소 제3차 정책포럼 자료집 『생태공동체와 전환마을운동』 23p

[그림 4] 제4차 정책포럼(2017.7.22., 환경재단)

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진다'는 의미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재 농지상속자 90%가 비농업인인 현실에서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살림의 경우 생산자 중에 2/3가 후계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이 기반이 되어 한살림은 농지살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산자의 40%가 임대농인 한살림의 경우, 어렵게 농약과 제초제가 없이 땀으로 일궈 놓아도 땅 주인이 내놓고 나가라면 그만이다. 농지살림운동이 아직 부족하고 어렵지만, 농지보전과 공유화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공동체지원농업(CSA)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의 한 형태로, 회원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영농과 생계에 필요한 현금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확물을 분배받는 것으로 소비자가 영농에 대한 위험을 생산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농사철 전에 미리 소비자는 대금을 농민에게 지불하고 생산할 물품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매주 수확되는 농산물을 박스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는 수시로 생산자를 방문하여 일손을 돕고, 수확이나 교육체험 등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차 산업(농수산업)과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 산업의 미래형 농업으로 소규모 '꾸러미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꾸러미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6~10명의 생산자 회원을 구성하고, 대도시 소비자 회원 40~50여 명을 제철에 생산된 각종 채소와 과일, 손두부, 콩나물, 유정란 등을 매주 택배로 보내 주는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 생산자들이 주도하는 방식이 있고, 기존의 생협이 주도하는 방식이 있으며, 최근 생산자들이 조직하여 주도하거나 아예, 완주나 청송, 평택, 서천, 제주도 등 지자체가 나서서 마을 단위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조직화하여 추진하는 방

식이 있다.

마.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과 귀농운동 방향(제5차 포럼)

1)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면서 “농업인들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을 지키고 있는 공직자 같은 분들인 만큼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법으로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비롯해 쌀 목표 가격제 인상과 쌀 생산 조정제 도입, 농어업인 직불금,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추진 등을 통해 농어업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4)]

그러나 농어업특별기구는 취임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관련법 3개가 국회에 계류된 채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정책도 타 정책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귀농운동 방향

2015년 <귀농어귀촌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7년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이 세워졌다.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는 비전으로 의지가 있는 귀농인 중심의 정책지원을 하면서 농촌에 사는 비농업인의 농업진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창농인의 초기 소득안정 및 기반확대를 위한 포괄적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청년귀농정책은 개인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육성목표를 설정하여 농업인력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2018년 청년귀농자를 늘리려는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 실제 청년귀농가구는 2016년 1,340가구, 2017년 1,325가구가 증가했고, 2018년에는 1,500가구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4) 한국농업신문. 2017. “특별기획-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농정공약 살피기1”. 5월 10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청년이 농촌으로 가는 것은 농업뿐 아니라 자연에서의 삶, 선택한 삶에 대한 의미 있는 갈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삶의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의 귀농귀촌, 대안적 삶과 소박한 일상에서의 실천적 삶, 치열한 경쟁대신 자신만의 삶을 갈망하는 청년의 지향, 도시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지역에 활용하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 등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유연하고 다양한 농외일자리도 필요하고 귀촌을 위한 청년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실제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홍성의 행복농장, 협업농장이나 제천의 누리마을, 울주의 소호산촌유학센터나 장수의 초록누리 협동조합, 합천의 주민여행사 동행, 서귀포의 제주살래, 완주의 씨앗, 구례의 군민극단 등은 모두 개인의 신념에 의해 활력을 갖고 움직이는 좋은 예이다.

[그림 5] 제5차 정책포럼(2017.9.29., 환경재단)

바. 토종씨앗보전, 자립의 조건(제6차 정책포럼)

▶ 토종씨앗 보존운동

콩은 원산지가 한반도입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고조선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북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콩(대두)을 재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콩을 비롯하여 토종 종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스스로 채종하여 씨앗을 심기보다 종묘회사에서 상품화된 종자를 구매해 파종합니다. 그러나 종묘회사에서 구입한 씨앗은 대부분

한 해만 열매 맺고 죽어버리는 불임 씨앗입니다. 더욱이 다수의 한국 종묘회사가 몬산토, 카길, 신젠타 등 다국적기업의 소유로 넘어가서 토종종자조차 비싼 로열티를 물고 역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수입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마당에 씨앗까지도 '종자 제국주의'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귀농운동론 2.0)

농업을 세우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이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과 물, 씨앗 3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 세 가지 기반은 점차 농민의 손을 떠나고 있다. 땅은 야금야금 개정된 농지법으로 인하여 점차 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농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5)]

더 큰 문제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씨앗의 문제이다. 이미 1990년대 말 우리나라의 3대 종자회사는 외국기업으로 넘어갔다. 그 종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종자도 당연히 외국기업의 손에 넘겨졌다. 본격적인 식물품종보호제도의 전면 실시에 이르면 이제 농민은 종자에 대한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씨앗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농지가 확보되더라도 농사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농민이 종자를 저장하고 심고, 나누거나 파는 씨앗에 대한 농민의 권리, 즉 농부권의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허때문에 자신이 수확한 농작물 가운데 일부를 종자로 비축하는 것조차도 불법인 경우가 허다하다. 한 업체는 농민에게 매년 종자를 팔고 면적당 기술 사용료를 받으면서, 자가채종 한 종자를 심으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기도 한다.

토종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으로 농부가 종자를 보유하고 선발 육종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도둑맞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종자수집, 그래서 가능한 증식, 나눔, 보존이 일부 단체가 아닌 마을 농가와 농민이 직접 주권을 형성할 수 있는 필연적이고 시급한 과제이다.

---

5) 김은진,"종자주권과 식량제국주의", 귀농정책연구소 제6차 정책포럼 자료집 『토종 씨앗 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립의 조건』, 15p

[그림 6] 제6차 정책포럼(2017.10.27., 환경재단)

사. 농민기본소득(제7차 정책포럼)

▶ 농민 기본소득 운동

'농민 기본소득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4% 대의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은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농가소득의 50%~90%까지 보전되는 독일, 스위스 등 선진 농업국의 직불금 지원 수준에 버금가는 실질적 농업소득 보전책이 필요합니다(귀농운동론 2.0).

농업은 생존산업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른바 선진국 중에 농업이 근간이 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농업이 자립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소득 감소로 인해 농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농업직불금은 규모의 부족과 형평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농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은 대단히 효율적인 정책이 된다. 더욱이 농업과 농촌은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도 기본소득은 중요하다.[6)]

6) 박경철,"농민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현실성", 귀농정책연구소 제7차 정책포럼 자료집 『농민기본소득』, 40p

실행방법에서는 농가 단위 지급, 개별 농민 단위 지급 방식이 있다. 2017년 농가 수는 104만 가구로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6조 2,400억 원, 30만 원을 지급하면 3조 7,440억 원이 되는데, 예산은 농업직불금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개별농민단위 기본소득제는 개별 농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며, 20세 이상의 농민 약 223만 명에게 매달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약 5조 4천억 원이 소요된다.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늘어날 것이다.

이외에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방식이 있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면 농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의견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살리는 취지이다. 이는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촌을 농업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농민과 상인,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들이 함께 있어야 마을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기조로 마을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수행한 교역적 비교역적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현대판 "농자천하지대본"의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림 7] 제7차 정책포럼(2017.11.28., 환경재단)

3. 실행워크숍

전술한 총 7차례에 걸친 정책포럼은 귀농운동론2.0의 구체화와 현실적 적용을 위한 논의였고, 이를 어떻게 귀농운동론으로 적용할지와 귀농운동본부의 프로그램 활동으로 수렴할

지를 논의하기 위해 귀농운동본부 임원들과 관계자가 6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했다.

가. 귀농운동의 활동 방향 모색

1) 농(農)과 함께 슬퍼하는 귀농운동, 생태-자립-소농의 가치를 향하는 귀농운동

'귀농운동이 극복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농(農)과 함께 슬퍼하지 않는 당대의 무감-무심이다. 귀농운동의 궁극은 농(農)의 사랑-연민-우애-연대-공명이다. 내 안에서 절로 우러나 북받치는 안타까움, 곧 슬픔이다. 귀농운동 수천 과제의 밑바탕은 슬픔이다. 슬픔이 귀농운동의 기조이며 색조이다. 귀농운동은 당신도 저곳에서 함께 슬퍼하자고 간절히 요청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슬퍼함으로써만 농(農)과 공존할 수 있으며 마침내 농(農) 된다.'[7]

<생태-자립-소농>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귀농운동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셋은 따로 떼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귀농운동과 조직에 스며들어 있다. 생태적인 농업을 하지만 자립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생태적이지 않아도 자립과 소농의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3가지 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로 비판하거나 올바른 귀농이 아니라는 단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로 일정한 방향으로 가며 노력하고 있음을 넉넉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내면적 가치도 때로 외재화되어 칼이 되어 주변이나 가까운 사람만 다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귀농교육이나 귀농운동이 생태-자립-소농 가치를 일깨우고, 노력하는 사람끼리 서로 북돋우며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와 이념이 교조화되어 현장의 노력을 비판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립을 위해 귀농 준비부터 1~5년 차, 10~20년 차 농가살림 생존을 위한 지혜를 구체적으로 모아야 한다. 귀농자 회원이 중심이 되어 생생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이다. 귀농자끼리 재무설계의 풍부한 사례를 모아 상담하고 걸러진 지혜를 서로 나누는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져 튼튼한 귀농이 가능하도록 장치가 있어야 한다.

---

7) 이진천, "現 귀농운동의 진단과 방향", 제2차 워크숍 자료집

또한 귀농자 회원 간에 농산물과 가공품의 유통, 판매를 지원하거나 거드는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지혜공유와 협동적 사업체를 귀농운동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농사에 관해 돈 잘 쓰는 법, 아끼고 줄이는 법, 정당하게 지원받는 법, 잘 팔고 함께 파는 법 등, 농사에 얽힌 경제의 범주는 무수하다. 개별적 삶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생존의 지혜를 협력을 통해 마련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 귀농교육과 파송이 아니라 현장에 기반을 두어 조직화하는 귀농운동

귀농운동은 교육과 잡지(통문)로부터 시작했다. 교육하고 파송하는 데 진력하였고 돌아보니 귀농자의 내공과 경험을 수렴하는데 게을렀다. 귀농통문 또한 여전히 귀농 초기의 기쁨만 담겨 있고, 농사로 몸과 마음에 피로가 누적된 자신의 고민이나 절박한 생존의 위기를 터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새로운 경험을 배우고 공유할 여지도 프로그램도 딱히 없다.

귀농운동은 쇄신하지 않으면 고립되거나 둔화된다. 각자 현장에서 바쁘고 넓게 퍼져 살지만, 귀농자가 스스로 발언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지혜를 공유하면서 더욱 공고하게 자립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귀농하는 사람이 지역공동체에 정착하도록 돕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귀농자는 친목이 아니라 운동을 위해 조직해야 한다. 당대의 귀농운동 과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그 해법 찾기의 주체가 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귀농자는 저마다 전공이 있다. 농법-종자-유통-가공-지역회생-이장-정책-거버넌스-교육-문화-복지-정치-기술 등등 주제는 헤아릴 수 없다. 핵심은 전공과 관심사별로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각 주제에서 귀농운동 과제를 먼저 설정하고 이것이 귀농운동에 수혈되도록 하는 것이다.

홈페이지와 카톡방, 밴드 등으로 소통하고, 팟캐스트 방송을 제대로 열어서 귀농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귀농운동이 되면 재미도 있거니와 크게 관심을 끌 수 있다. 나아가 귀농인의 날도 자발적으로 모여 각자 애환을 털어놓고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이 된다면 감동일 것이다.

3) 시대와 불화하는 귀농운동, 현장 속에 과제를 실현하는 귀농운동

<귀농운동론2.0>은 "農적 문명으로의 전환과 대안운동의 시도"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운동, 농민지역화폐운동, 농지신탁운동, 도시농업운동, 적정기술운동, 토종씨앗운동, 생활기술학교, 대안적 육아와 교육, 공동체복지운동, 농부학교와 생태농활, 명상 영성운동 등을 열거하며 시행되어야할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뜨거운 각성과 열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귀농운동은 대안적-건설적인 운동이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싸우는 불덩어리가 없어 열정과 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모순을 직시하고 과감히 시대와 불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귀농자가 농업부분의 다양한 적폐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을 청산해야 하는지부터 뜨겁게 밝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귀농운동본부가 그야말로 <본부>라고 한다면 마치 전투와 전쟁 도중 야전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는 캠프를 뜻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귀농운동본부는 전시작전본부 역할을 하진 않았다. 오히려 사관학교나 신병교육대에 가까웠고 책을 펴내는 정훈본부에 가까웠다. 물론 귀농자는 귀농본부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겠지만 본부는 본부다운 동력의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현장과 끊임없이 교신하는 야전본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조직변화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귀농자의 힘과 네트워킹으로 채운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역본부를 통해 현장의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운동본부, 운동캠프, 전투본부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나. 귀농운동 2.0의 구체화를 위한 실천

1) 마을공동체만들기의 출발

마을만들기의 방법은 각 지역의 역사적 특징, 장소적 특징에 따라 출발이 다르고 어떤 사람이 활동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대부분 귀농자는 뉴커머(New Commer)들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튼튼한 귀농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이다. 다음으로 마을을 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첫 활동은 우선 마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마을의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내력, 그리고 누가 살았고, 어떤 유래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 활동은 귀농자가 마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게 한다. 우선 마을이 어떤 역사를 가진 곳인지, 그리고 누가 사는 있는 곳인지를 알고 기록하는 것은 마을 토착농부들의 삶을 지역에서 계속이어 가는 활동이 되기도 하다.

- 마을 지리, 역사, 인물 기록: 마을 이야기를 아시는 분을 구술사로 만들고, 이를 녹음, 녹취할 기록사를 양성한다. 구술사는 마을 기록을 남길 수 있고, 기록사는 마을에 정착할 주민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을의 흑백사진을 모아 전시, 생애구술사, 생애보 등을 만들어 준다든가 마을에 보관해두는 것은 마을주민들과 일체적 교감 작업을 위해서도 대단히 효과가 있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 통신원을 두고 기록 연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마을공동체의 출발이 될 수 있다.

- 귀농자 정착 기록: 귀농자 정착과정을 기록하여 함께 공유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생태귀농, 자립귀농은 초기 정착이 더욱 어렵다. 이 초기 정착과정의 고민과 갈등을 공유하는 일은 다른 귀농·귀촌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2) 중요한 쟁점의 귀농운동 의제화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을 살리며 농촌을 살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제이다. 이 의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귀농본부가 농민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운동을 펼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20년 전에는 우리 사회에 드물었던 귀농이라는 의제를 사회화했다면 이제는 귀농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에 집중적 캠페인과 정책제안, 로비 등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3) 귀농중간지원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은 천차만별이다. 사무실과 실무자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건강하게 역할을 하는 곳도 있지만,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실무역량에도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나 교육, 정착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시스템 등이 모두 달라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귀농운동은 이들 지원조직의 실무자들끼리 자주 모이고 교류하게 하는 지역별 워크숍과 전국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촉매하여 지원조직 활동의 내적 균질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생태적인 귀농이 되도록 사상과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귀농지를 정하고 안착하는데, 그리고 생산물의 판매와 유통 등에 서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귀농자의 지역별 정례모임과 워크숍

귀농운동본부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광주, 화천, 거창, 대구, 대전 등지에 귀농학교가 있으며 많은 귀농인을 배출했다. 귀농한 지 20년이 되어 기반을 잡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귀농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살고 있다. 귀농인은 지역별로 정례 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가까운 사람끼리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지역의 이슈나 지역문제에 공동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오래전에 터를 잡은 사람들이 새롭게 귀농한 사람을 위한 멘토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에 융화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 노조나 기타 단체의 은퇴자를 위한 귀농교육 및 안내

베이비붐 세대(1957~1961)가 대거 은퇴하는 2017~2020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활동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과거 1986~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중심역할을 해온 사람들로 가장 역동적이며,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이다. 또한 최근까지 노동운동의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도 조직적 경험도 풍부하다. 노조는 조

직화되어 있어서 은퇴 이후 집단적인 활동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및 산촌의 마을만들기, 공동체만들기 귀농귀촌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노조나 단체의 조직과 연계가 되어있어서 생산물의 판매에도 원활한 통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민노총을 비롯한 다양한 산별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건강하고 튼튼한 귀농귀촌운동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 귀농운동 2.0 이후 새롭게 보완할 과제

1) 도시와 농촌의 상생전략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만들어 먹거리 상생, 문화상생, 자원상생, 일자리 상생, 상생상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먹거리 상생의 경우 도시에 농부시장을 만들고, 농수특산물직거래 장터와 서울김장문화재, 농어촌현장체험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상생의 경우,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문화예술단교류, 아토피 치유체험 등을 벌이고 있고, 특히 일자리 상생활동의 경우에는 귀농, 귀촌 희망가족 영농교육과 청년, 중장년층 일자리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큰 과제는 농촌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 뉴커머(New Comer)인 귀농자 유치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대도시는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 문제가 급격한 사회적 과제가 되어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계획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귀농장터와 먹거리장터 등 귀농자와 농촌의 자립을 위한 도시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해 특히 고용과 일자리의 문제라는 사회적 과제를 포괄하는 운동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초기 귀농운동본부가 시작한 도시농부, 도시텃밭운동은 이제 전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까운 도시민들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먹거리를 자립하는 방법과 나아가 도시민이면서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해 의미있는 운동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2)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사회에서 행복지표를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발전(SDGs)지표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도)가 GDP, GNP 등 경제지표를 대신하여 전 세계적인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2011년 UN은 총회결의를 통해 행복추구를 공공정책에 반영하도록 권장하면서 2012년부터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로 발표했고, OECD 또한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를 매년 발표했다. 영국은 2010년 'General Well-Being(GWB)'을 천명하고 통계청 차원의 국가행복지표를 개발 발표했고, 일본은 2011년부터 내각부 '행복도 지표'를 발표하여 2013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모여 연합으로 '행복리그'를 만들어 '행복실감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중국과 캐나다, 아랍, 브라질 등도 양적인 가치가 아닌 삶의 질로서의 가치를 발전의 지표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곧 귀농귀촌운동이 지향하는 바이며, 이제는 생태적 가치와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명적 전환을 강제하는 신호이며 물질적 생활조건, 삶의 질, 지속가능성, 교육수준, 건강과 사회적 관계, 거버넌스, 사회적 형평성, 생태적 회복력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사회디자인을 구상하면서 귀농운동의 골격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3) 인구변화와 사회적 변동을 고려한 장기적 비전

앞으로 귀농운동은 마을살이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와 초고령사회 및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야 하고, 한편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4차 산업 혁명을 고려한 기획이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하고 있기에 귀농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판매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로 인해 어쩌면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생활양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의 자립적인 순환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남북문제와 통일을 대비한 귀농운동전략

최근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는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 간의 교류뿐 아니라 민간의 교류도 단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류 중에 대륙횡단 철도 연결과 북한 나무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구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귀농운동은 보다 장기적인 녹색국가론의 관점에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교류하여 거대한 국민국가나 강성대국이 되는 근대적인 비전이 아니라 인류문명 전환의 시금석이 될 만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생태적 국가의 모델을 구상해야한다. 이는 분권화에 기반을 둔 국가모델로 풀뿌리 자치를 단위로 한다. 그 때문에 통일사회를 대비하여 남한 내의 풀뿌리 자치가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분권화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전과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유기농 또는 자연농기술이 북한에 이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통일을 대비한 농업과 농업전문가의 양성 및 지역사회를 디자인하는 전문인력이 배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인도적 개발협력방식과 연관하여 북한 지역 중심의 자립적 사회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협동생산 경험, 남한의 협동조합 경험 등을 통해 서로 공통의 경제시스템을 확장하면서 이후 경제적 동일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변화는 남북의 교류를 통해 엄청난 정치, 사회, 문화영역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원활한 교류도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고려한 귀농운동전략 나아가 한반도 국가개조프로그램을 염두에 둔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5) 동아시아적 관점의 포괄적인 그랜드디자인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면 동아시아의 국가 간의 관계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TCR)과 러시아(TSR) 등의 철도가 이어지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원활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값싼 곡물의 교역이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중·일·러의 지리적 확장은 농업 자립에 부정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에, 발전적인 새로운 구상과 비전을 기획할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교류와 평화를 통해 동아시아 민중들의 정신적인 통합과 의미 있는 정치 경제 문화공동체로 나아가는 다양한 대비와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귀농운동2.0은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순환사회를 목표로, 자립적 삶과 연대의 삶, 마을귀농, 지역귀농을 통한 지역순환사회 건설, 농적 문명을 향한 다양한 대안운동 시도, 이를 위한 사고와 자세의 전환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귀농자는 현실적 삶의 어려움에서 도피, 경제적 성공에 대한 유혹, 은퇴 후 제2의 인생에 대한 고민, 삶의 근본뿌리를 찾기 위한 고민 등 다양한 형태의 동기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귀농운동 20년, 이제 우리의 이상은 생태가치와 자립하는 삶을 지향하지만 우리의 실천은 지역, 현장 단위로 발을 내려야 할 때이다.[8] 지역과 지방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운동이어야 한다. 나를 바꾼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내 생각이 옳다'는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지역민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너(지역민)가 하나가 될 때 새로운 동력이 생긴다. 네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면 함께 하는 나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지역의 모든 농민과 지역주민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데 나만 지속가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농촌과 농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나와 네가 할 수 있어야 자신의 삶도 지속가능해 지고, 내 이상도 실현할 수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늘어나는 귀농 인구에 반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충성도와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은 해가 갈수록 식어가고 있다. 현재 귀농교육을 수료한 후 귀농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15% 내외이며 나머지 85%는 여전히 도시에 살고 준비를 하고 있다. 매년 양산되는 이 대다수 사람을 우리 농업농촌의 우군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귀농교육

8) 박기윤, "귀농운동론 2.0 의 현실화를 위한 과제", 제3차 워크숍 자료

의 방향을 귀농을 실현했을 때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만 맞추지 말고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민농업 개념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고,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과의 연계로 인해 농업과 농촌이 도시에 있는 나와 별개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자라 생활하는 세대들이다.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탯줄이 끊어진 세대인 것이다. 그간의 식생활교육과 도농교류 체험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농촌과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성원을 얻으려 하는 시도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농민과 도시민, 소비자와 생산자를 구분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귀농의 양적 확대는 정부에게 맡기고, 우리는 가치의 확산으로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귀농의 성공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가치의 전환이 핵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귀농운동본부부터 결과가 아닌 과정, 가치의 전환을 중심축으로 삼고 귀농운동을 펼쳐야 한다.

[참고문헌]

1. 귀농정책연구소. http://refarmi.org/
2. 귀농정책연구소. 2016. “귀농운동론 2.0”